

##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공시송달)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5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95조의2, 제127조의3 등 위반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21일  
금융위원회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주민번호 (등록번호)	주 소
정인지	570226-*****	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

### 2. 서류의 명칭 :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

### 3. 서류의 내용 :

(1)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5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예정된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며,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17년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2)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다 음 -

처분 대상자	처 분 원 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

처분 대상자	처 분 원 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정인지	<p>1.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</p> <p>□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</p> <p>◦ ■■■■■(주)는 2011.1.24.~2016.5.31.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454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38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9억원(2016.5.31.기준) 등 총 16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 <p>2.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</p> <p>□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도</p> <p>◦ ■■■■■(주)는 2011.1.24.~2016.5.31.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398건(보험금 142억원)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</p>	보험업법 제95조의2, 제127조의3	퇴직자 위법·부당 사항(감봉 3월 상당)

4.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